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85167 손해배상(자)

원 고 1. 양○○ (91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곽○○
2. 양○○ (58 -1)
3. 곽○○ (64 -2)
원고들 주소 용인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전국□□□□□□□□□
서울
대표자 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09. 6. 15.

판 결 선 고 2009.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96,157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4. 00.부터 2009. 6. 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5,705,82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4. 0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8. 4. 00. 00:00경 용인시 □□구 □□동 □□□□ 식당 앞 삼거리에서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00바 0000호 택시를 운전하여 □□동 방면에서 진행 중,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원고 A 운전의 경기 □□ 가 0000호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 왼쪽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좌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3)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1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9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나아가 원고 A에게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위 택시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보호좌회전은 반대방향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자신의 운행을 방해하면서까지 좌회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1) 원고 A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골절된 좌측 대퇴골이 유합되지 않고 있어 2010. 2.경 이에 대해 재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15,000,000원이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2010. 2. 00.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13,741,297원 $\{15,000,000\text{원} \div (1 + 0.05 \times 22\text{개월} \div 12\text{개월})\}$ 이다.

(2) 원고 A에 대해서 경비골 및 족부의 금속판, 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5,000,000원이 소요된다.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00.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4,705,882원 $(5,000,000원 \div (1 + 0.05 \times 15개월 \div 12개월))$ 이다.

(3)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 83cm에 대해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15,410,000원이 소요된다.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00.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14,503,529원 $(15,410,000원 \div (1 + 0.05 \times 15개월 \div 12개월))$ 이다.

나. 기왕치료비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624,50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 A는 나아가 교통비로 합계 497,48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8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이후 이로 인한 응급후송비로 1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367,480원에 대해서 보면, 갑 8호증의 1 내지 10에는 목적지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위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교통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개호비

원고 A는 자신이 입원한 137일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로 8,173,84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A에게 입원기간 동안 간호사의 간호를 넘어 전문적인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

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과실상계(과실 10%)

(1) 향후치료비 : 29,655,637원 $\{(13,741,297\text{원}+4,705,882\text{원}+14,503,529\text{원}) \times 90\%\}$

(2) 기왕치료비 : 1,579,050원 $\{(1,624,500\text{원}+130,000\text{원}) \times 90\%\}$

마. 공제

피고는 원고 A의 치료비로 합계 18,385,300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중 원고 A의 과실로 인한 부분인 1,838,530원 $(18,385,300\text{원} \times 10\%)$ 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바. 위자료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대퇴직근 파열, 중앙광근 파열, 좌 원위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전경골근, 장족지신전근 파열, 좌 원위비골 골절, 좌 족부 제5 중족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심부열상, 좌 족부 제5 족지 신전건, 소비골건, 장비골건, 단비골건, 제5 족지 외전건, 단족지 신전건 파열상 등의 증상을 입어 2008. 8. 00.까지 4개월 이상 입원을 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골절된 대퇴골이 유합되지 않아 2010. 2.경에 재수술을 받아야만 하여 2년 이상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위와 같은 입원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가 아직 미성년자로서 장기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일실수입 청구를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원고 A는 8,000,000원, 원고 B, 원고 C는 각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10, 갑 8호증의 11, 을

5호증의 각 기재,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7,396,157원(향후치료비 29,655,637원 + 기왕치료비 1,579,050원 - 기지급 치료비 중 과실분 1,838,53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00,000원(위자료)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4. 00.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6. 0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_____